

광주·전남 통합, ‘따로 또 같이’ 생존할 최적 해법 찾아야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행정통합 방향’ 통합 현안 첫 토론회
법적 지위·교육분야 포함 여부·통합 미래상 등 6가지 쟁점 제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선결해야 할 ‘6대 핵심 쟁점’이 제시됐다.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어떤 형태의 자치 단체를 만들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단체별 행정통합론 제기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발제자로 나서 통합 과정의 핵심 쟁점 6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단장이 제시한 쟁점은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 특별법안 구성, 권한 특례 유형, 교육·자치경찰 통합 여부, 통합 자치체의 미래상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시급하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 사안은 ‘통합 자치단체의 종류’다.

이는 통합 자치체의 간판이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현재 논의 가능한 모델로 ‘광주전남특별광역시’(1안)와 ‘광주전남특별자치도’(2안)를 제시했다.

1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목표로 하되 기존 자치구를 유지하는 도심형 통합 모델인 반면, 2안은 제주나 강원처럼 도(道)의 기능을 강화하되 시·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농 복합형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자치권 축소를, 전남도는 농촌 소외를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장을 조율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김 단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단순 선언적 통합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충남은 296개 조합, 대구·경북은 272개 조합에 달하는 방대한 특별법안을 통해 조작, 재정, 개발 관련 특례를 담았다.

광주·전남 역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장관의 권한을 도

지사에게 이양받거나, 법률 시행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포함 여부는 이해관계가 침해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에서 교육과 경찰 분야를 제외했지만,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 특례와 자치 경찰제까지 포함하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 더불어 교육·치안 행정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먹거리 책임질 ‘미래상(그랜드 디자인)’ 구체화도 핵심 과제다. 김 단장은 광주·전남을 3대 거점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광주권(나주·담양·장성 등)은 AI와 에너지, 모빌리티 중심의 첨단 산업 기지로, 서부권(목포·무안·신안 등)은 해양관광과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동부권은 우주항공과 이차전지, 제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기워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소외되는 곳 없이 고른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마지막 쟁점은 이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될 ‘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이다. 김 단장은 ‘포용을 넘어 공정으로’라는 화두를 던지며,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과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계적 통합은 지역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 자료를 통해 “지금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따로 또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대통령, 시진핑에 북핵 포함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 요청

시진핑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상그릴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순방 행정부 차관급 회담에서 “(지난 5일) 제가 중국 측에 요청한 것 이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에게 “우리는 (북한과)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이에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나. 북한에서는 엄청 불

안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쉽지 않다. 오랜 시간 그렇게 쌓아온 압박이라고 할까”라고 되풀이하며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원화 대화가 시작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것인가. (적대를 완화해야 하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표 판다’ 두 마리 광주 우치동물원에 오나

사육비 연간 10억 필요…시설 건립 등 정부 전폭 지원 있어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광주우치동물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협종·협한 정서의 해결과 국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주석은 구체적인 인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판다를 언급한 것은 우치동물원이 지난해 호남권 유일의 ‘제2호 국가 거점동물

원’으로 승격돼 동물 진료와 복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치동물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곰이·송강’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등 660여 마리의 동물을 돌보는 등 ‘소프트웨어’는 갖췄지만, 판다를 맞이할 ‘하드웨어’는 없다.

사무소는 국내 유일 판다 사육지인 애버랜드를 풍선한 결과, 판다 한 쌍을 위한 독립된 보금 자리를 만드는 데 최소 3300㎡(약 1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판다는 단독 생활을 즐기는 습성 탓에 암수 분리 공간과 은신처, 넓은 방사장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시설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하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최고급 사육 시설 건축비는 물론이고, 애버랜드 기준 사육비만 연간 10억원에 육박해 유지 관리비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에는 큰 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사안인 만큼 단순한 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적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정부가 시설 건립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치동물원의 우수한 인력과 결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판다 사육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판다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를 기억해 준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국 “광주·전남 통합 놓치면 지방 전성시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초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가 ‘첨단지능’의 주역이라면 전남은 ‘무한에너지’의 주역”이라며 “두 지역이 하나로 뭉칠 때 메가시티라는 강력한 체급으로 지방 전성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교부세 확대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의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와 사람의 수도권으로만 편리하며 지역의 심장은 차갑게 심어가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성장의 박동이 살아나는 ‘지방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전형일: 2026. 1. 29.(목)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 외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5.(월) ~ 19.(월)
·전형일: 2026. 1. 22.(목) 오후 2시

임을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벽지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